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3. 3.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법무부

-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할 것 1
- 피감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 1
-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 1
- 자료제출 시 근거법령 등 규정을 적시 할 것 1
- 대검 범정기획관의 수사권한 유무를 확인해줄 것 1
-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 집행 지양 1
-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를 개발할 것 1
- 외국인지문 날인제도를 신속히 재도입을 검토할 것 2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2. 대검찰청

-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에 대해 보고할 것 3
- 범정기획관실의 범죄정보 수집기준을 보고할 것 3
- 예산심의 시 범정기획관실의 정보수집 내역 등을 제출할 것 3

- 수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 3
-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검 국제협력단
중심으로 도피사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3
-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이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 4
-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역량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직원
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기소 후 무죄가 되면 검사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5
- KIKO 등에 볼 수 있듯이 현행 항고, 재항고 제도의 문제가 많으
므로 개선할 것 5
- 대검예규 등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준수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 6
- 무죄재판 게재 제도 이용률을 제고할 것 6
- 수사과정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할 것 7
-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대책, 특히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
할 것 7
-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미약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8
- 인권모욕적인 신문,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지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 범정기획관실 직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8

- 경찰과의 DNA 공조수사 강화할 것 9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
- NLL 논란과 관련한 정문헌 의원 피고발 사건 수사 시 신중을 기해줄 것 9
- 서울경찰청의 세무서장 뇌물사건 관련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인척인 검찰 간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유념할 것 .. 10
-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 대체적으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검찰의 엄단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단할 것 ... 10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성 정보 수집은 불법의 소지가 크므로 중단할 것 11
- 임금체불 악덕기업주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단속할 것 11
- 음란물 제작·배포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수사할 것 11
-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2
- 출입국기록 무단 조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2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대검 중수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2

**3.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13
-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 형사피의자 보상금 등에 대해서 검찰이 관심을 보일 것 13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본부장 간의 대화내용이 도청된 사건 및 정수장학회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14
- 장기 불법 밀매조직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14
- 민생침해사범, 형사사범에 수사인력 보강할 것 15
- 최근 5년 동안 검찰 수사중 자살한 피의자 총 33명에 달하는 문제 관련 과잉수사행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5
-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할 것 16

4.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고검 재기수사명령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울 것 16
- 플랜트노조,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건과 관련하여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17
- 부산고검 관내 사건 중 무죄 비율이 급증하였는데, 무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 17

- 울산에서 장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석방,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20
-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20
- 노건평씨 '몽치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보고할 것 20
- 특정정당 가입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양할 것 21

5. 광주고등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검찰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 21
- 장애인 성폭력 관련하여 일반인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21
-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약물치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22
- 본연의 수사 업무에 집중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 .. 22
- 검찰이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인권옹호기능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 23
- 제주해군기지 사건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이 다수인데, 처벌이 만능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 24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 신속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할 것	○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자료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원실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음
	○ 피감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	○ 요구자료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자료제출 전 의원실과 협의하는 등 충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	○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음 ○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774호)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 자료제출 시 근거법령 등 규정을 적시할 것	○ 부득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 미제출 자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임
	○ 대검 범정기획관의 수사권한 유무를 확인해줄 것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8호) 제3조의 4에 의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 집행 지양	○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 예산의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집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하겠음
	○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를 개발할 것	○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TF 구성, 운영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9.~12. 학계, 대검 및 실무자 등 9명으로 TF 구성, 6회 회의 개최 - 성폭력 재범 사례 분석, 외국 입법례 및 보호감호 제도와의 차별화 방안 등 연구 <p>○ 보호수용제도의 주된 반대 근거는 보호수용이 '실질적인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향후 TF 회의 등을 통해 고위험군 흉악범으로 대상범죄 한정, 수용자 처우 개선 등 위헌소지 없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음</p>
	<p>○ 외국인지문 날인제도를 신속히 재도입을 검토할 것</p>	<p>○ 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 중임('12. 1.)</p> <p>※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p>
	<p>○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p>	<p>○ '17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되고 현재 로스쿨에서 취약계층 입학전형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예비시험 조기도입은 초기 단계인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p> <p>○ 따라서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제도의 정착여부,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현황, 신규법조인 진출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 3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15년경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임</p> <p>※ 다만, '13. 1. 선진 외국사례를 파악</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한 상황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에 대해 보고할 것	○ 첨단 과학 기기를 활용한 범죄의 급증, 객관적·물적 증거수집 위주의 수사관행 정착 등으로 과학적 증거 분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최근 3년간 증거분석 건수가 연평균 40%씩 폭발적 증가 ○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에 선제적·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함
	○ 범정기획관실의 범죄 정보 수집기준을 보고할 것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공안사건 등에 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예산심의 시 범정기획관실의 정보수집 내역 등을 제출할 것	○ 사생활보호,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 훼손의 문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정보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수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	○ 수사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음
	○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검 국제협력단 중심으로 도피사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대검 국제협력단은 매년 일선 검찰청의 해외 도피 기소중지자 및 해외 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내역을 파악하여 관리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012. 1. 1. ~ 2013. 1. 31. 전국청 해외도피 기소중지자 627명, 자유형 미집행자 73명의 자료를 확보·분석 - 대상 외국기관과 접촉하여 중범죄자 위주로 송환 계획 수립 예정 ○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는 해당국에 불법체류중인 해외도피 사범 검거·송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양해각서 체결 등의 공조 방안을 연구중임 ○ 해외도피 중범죄자들의 경우 기존 범죄인인도요청, 인터폴 적색수배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검거·강제퇴거요청 등의 조치로 효율적인 검거 및 송환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이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노력한 결과, 범죄수익환수 실적은 2012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실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더욱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역량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찰, 직무 윤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기소 후 무죄가 되면 검사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게 통지하여 향후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자료 및 검사적격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평정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KO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항고, 재항고 제도의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KO 사건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가 적절히 기재된 옵션가격표를 매월 기업에 송부하는 등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 및 재항고 기각된 사안임 ※ ‘11. 7. 19. 혐의없음 처분, ‘12. 2. 6. 항고기각, 같은해 5. 22. 재항고기각 ○ 검찰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 및 재항고 사건에 대해 보다 충실히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예규 등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준수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사건 등 미제 일소를 위한 전국 형사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검찰내부통신망에 청별 일반 및 장기미제 현황 조회 기능을 설치하는 등 고소·고발사건 미제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2. 9. 전국 각 형사부 워크숍 개최 및 미제사건 현황 조회기능 설치·운영 ○ 2013년 상반기 검사 인사시 전국 주요 지검에서 형사부 검사를 증원하고, 우수·경력 검사를 배치하는 등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재판 게재 제도 이용률을 제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재판 게재 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제도 안내문' 과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민원실 및 피의자 대기실에 비치하게 하고, 무죄 확정 피고인의 주거지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하였음('12. 10) ○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무죄재판 게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과정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출석요구·결과 통보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12.11.) ○ 아울러 장애인 특성·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진술분석관 활용, 출장조사, 수화통역인 활용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을 향후에도 철저히 시행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대책, 특히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사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각하제도, 형사조정제도, 고소장 표준서식 활용, 민사적 법률구제 수단의 안내 등을 시행 중임 ※ 신속하고 적정한 고소고발사건 처리를 위해 「고소고발사건 처리지침」 제정, 시행('11. 2.) ○ 현재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남고소·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특히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중 대처하고 있음. ※ '12년 무고사범 9,142명 단속, 71명 구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앞으로도 남고소·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음
	○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미약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범죄,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피해자가 인터넷상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보복 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을 확대할 예정임
	○ 인권모욕적인 신문,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지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 556호)을 준수하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담당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범정기획관실 직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수시로 자체적인 감찰과 교육을 실시하여 권한남용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경찰과의 DNA 공조 수사 강화할 것	○ 신속하고, 효율적인 DNA-DB 운영을 위해 검·경간 DNA정보 교류시 사건정보 동시전송, SMS를 통한 DNA일치자 신속 통보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13. 3.) ○ 앞으로도 검·경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DNA 공조수사를 강화토록 하겠음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화·개선 강화, 집단적·상습적 폭행, 성폭력 사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교화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안교육, 봉사활동, 정서교육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소년전담검사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범질서 체험 학습 등을 계속 실시하겠음 ○ 형사절차에 교사의견을 반영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 NLL 논란과 관련한 정문헌 의원 피고발 사건 수사 시 신중을 기해줄 것	○ NLL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정문헌 의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13. 2. 21. '혐의 없음' 처분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의 세무서장 뇌물사건 관련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인척인 검찰 간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유념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한 것임 ○ 일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경이 기존 압수수색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이미 확보하였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기각된 영장을 그대로 재신청했기 때문임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13. 2. 27. 기소중지 처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 대체적으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검찰의 엄단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9.경부터 성폭력 범죄 유발 주요 이유인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근절을 위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 단순소지자 처벌 강화 등의 '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처벌기준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아동음란물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음 ○ 또한, 개선의 정이 있는 단순소지자의 경우 처벌보다 음란물의 유해성, 중독치료 등의 교육 이수시에 기소유예를 해 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으로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성 정보 수집은 불법의 소지가 크므로 중단할 것	○ 검찰은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는 수집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도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겠음
	○ 임금체불 악덕기업주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단속할 것	○ 상습적, 악의적인 임금체불사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음
	○ 음란물 제작·배포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수사할 것	○ 최근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소지자도 전원 처벌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일반 음란물 제작·배포자의 경우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강간 등 성폭력범죄행위로 8년 복역후 음란물 2,113건 업로드하여 유포한 피의자 인지, 구속기소(수원지검, '12. 9. 4.)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이행·대량 게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 9. 16.부터 시행 중</p> <p>○ 음란물 제작·배포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등 향후 지속적 단속과 관리를 통해 음란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음</p>
	<p>○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p>	<p>○ 중상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적 중상해 포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적극 지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어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음</p> <p>○ 2013. 6.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지원되고, 2013. 12.부터 장애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p>
	<p>○ 출입국기록 무단 조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p>	<p>○ 수사상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출입국 조회를 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겠음</p>
	<p>○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대검 중수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지원부서를 신설할 것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정 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찰 특별수사기능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음
<p>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기간 중 국가배상사건 643건 접수, 570건 처리하고 73건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수감기간 미처리 226건 ○ 2013. 1. 24. 신청 후 상당기간 경과한 사건을 일제조사하여 27건을 심의 상정 및 처리하였고, 사실조회 회신 지연 기관을 상대로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였음 ○ 향후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심의기일 또는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적기 처리계획 검토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5. 31. 저축은행 발행의 후 순위사채 투자자들이 신청한 국가배상사건은 현재 심의중이고,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 되면 신속하게 심의하여 처리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형사 피의자 보상금 등에 대해서 검찰이 관심을 보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청별로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조 및 보상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안내문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관련자에게 발송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 구조에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보상심의회 및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지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관계기록과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향후 피해자 구조 및 형사 피의자보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본부장 간의 대화내용이 도청된 사건 및 정수장학회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본부장 간의 대화내용 도청 사건에 대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 2013. 1. 18. 한겨레신문 기사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함 ○ 정수장학회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2012. 10. 18. 고발장 접수 후 2012. 11. 1.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발인 전원을 소환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및 기부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종합하여 2013. 1. 7.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불법 밀매조직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청별로 전담부서를 지정, 전담검사로 하여금 장기 불법밀매 조직 관련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민생침해사범, 형사사범에 수사인력을 보강 할 것	○ 고검은 항고사건의 원칙적 직접경정 등 직접 수사기능을 강화하여 산하 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항고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수감기간 중 직접경정률 46.2% ○ 각 청별로 2013. 2. 정기 인사 시 형사부에 검사 증원 및 우수·경력 검사를 배치하는 등 형사사범에 대한 수사인력을 보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한편, 각 청별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구성(‘13. 3.)하여, 불법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서민형 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검찰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가 총 33명에 달하는 문제 관련, 과잉수사행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각 청별로 영상녹화조사 적극 실시, 심야조사 엄격 제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적극보장 등을 통해 강압수사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도 인권침해여지가 없도록 집행절차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과정에서의 적절한 언어사용과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음 ○ 각 청별로 공소시효임박 기소중지사건 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시효만료 전에 검사가 직접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정지사유와 재기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현장수사지원반 등을 통해 시효만료 임박 기소중지사 검거에 노력하고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경력검사에게 배당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공소시효 도과를 방지하고 있음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검 재기수사명령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자세로 항고인을 면담하여 수사미진 여부를 경청하고, 항고기각 처분 시에도 법률구조제도 안내 등 실질적 분쟁 해결을 지향하겠음 ○ 항고사건처리에 있어서 재기수사명령을 할 경우 재기수사명령 후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여 처리하는 직접경정을 활성화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플랜트노조,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건과 관련하여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플랜트노조 폭력사건, 화물연대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주동자들을 구속기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음 ※ 화물연대 방화사건 관련 8명 구속기소, 5명 실형 선고 ※ 플랜트노조 폭력사건 관련 3명 구속기소, 2명 실형선고 ○ 울산지검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야간 죽봉 사용 폭력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동자들에 대하여 수사중임
	○ 부산고검 관내 사건 중 무죄 비율이 급증하였는데, 무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	【부산지검】 ○ 부산지검의 2012년 1심 무죄율은 0.38%로 전년(0.50%)보다 감소하였고, 2심 무죄율은 2.27%로 전년(1.63%) 보다 다소 증가함 ○ 항소심 무죄율 증가이유 및 대책 - 별다른 심리 없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 달리하여 1심 유죄 선고된 사건을 파기, 무죄 선고한 사례 다수 있음 - 공소유지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별다른 심리 없이 무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상고하여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무죄방지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단계에서는 철저한 증거수집, 피의자의 변명이나 반대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증거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 공판단계에서는 중요사건의 수사 검사 직접 공판관여를 확대하고 공판검사의 적극적인 보완수사 실시와 위증사범 단속 강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 공판부에서 매월 무죄 사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최근 동향, 무죄 이유, 공판상의 문제점 등을 수사 검사들에게 피드백, 수사에 반영 토록 함 <p>【울산지검】</p> <p>○ 수감기간 중(2011. 9. 1.~2012. 8. 31.) 전국 무죄율 평균은 1심 0.66%, 2심 1.89%임에 비하여 울산지검은 1심 0.58%, 2심 1.7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임</p> <p>○ 추후 주기적인 무죄 분석 및 대책 마련, 수사부서와의 연계 강화, 위증 사범 철저 단속 등 충실한 공판수행으로 무죄율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창원지검】</p> <p>○ 수감대상 중(2011. 9. 1.~2012. 8. 31.) 창원지검의 무죄율은 1.05%였으나 2012. 10. 10. 수사 및 공판 단계별 적극적 무죄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한 결과 2012. 9.~2012. 12. 무죄 율이 0.52%로 급감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단계에서의 무죄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증거수집 및 반대증거 검토 · 충실한 공판카드 작성 · 기소 후 보강수사 등 공판검사와 상시 협조체제 유지 - 공판 단계에서의 무죄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 시작 전 면밀한 기록 검토로 철저한 공판 준비 · 특히 무죄 주장 사건의 경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여 법리를 설명하는 검찰 의견서 적극 제출 ·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변경청구권 적극 행사 · 「위증의심사범분류카드」 작성 등으로 충실한 위증 수사 · 수사검사의 직접 공판 관여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울산에서 장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석방,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 2012. 10. 26. 울산지법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긴 하나 그 장애의 정도가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울산지검은 즉시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후 법률조력인 지정 및 6개월 간 매월 30만원 경제적 지원 ○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신변보호 호출기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였음 - 중앙선관위로부터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 기소하였음 ○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노건평씨 '뭉치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보고할 것	○ 노건평씨 '뭉치돈 의혹'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2012. 6. 19.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되어 현재 위 청에서 계속 수사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특정정당 가입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양할 것	○ 공안사건 수사 도중 압수된 당원 명부를 토대로 수사 착수한 사안으로 특정정당 탄압 의도는 전혀 없음 ○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고 정치 활동을 금하는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였음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검찰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	○ 검사장이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으로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 검사와 직원 모두 법질서 수호와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음
	○ 장애인 성폭력 관련하여 일반인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전담검사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수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업무를 수행 중임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법률조력인, 신뢰관계인, 장애인 전문가 동석 하에 절차 진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 수행시 피해 정도,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재범 방지 ○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술 분석, 유전자감식 등 과학수사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약물치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등을 통하여 성도착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청구중임 - 2012. 11. 남자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청구하여 법원에서 1년 약물치료 명령 선고 - 2013. 1.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대해 청구하여 법원에서 5년 약물치료 명령 선고 ○ 앞으로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연의 수사 업무에 집중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 본연의 수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범죄정보 수집은 수사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휘감독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검찰이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인권 옹호기능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	○ 관내 청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정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원 활동 등을 통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광주지검은 2012년 하반기까지 3회 연속, 전주지검은 2012년 상반기 각 인권보호 우수청으로 선정됨 ○ 민원실, 휴게실 등에 인권침해신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이 다수인데, 처벌이 만능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함 ○ 다만,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중한 사범 위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사법처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임